

# 2003년 국내외 정세 전망과 한농연의 활동방향

- 한농연 정책조정실 -

## 국내외 정세 전망

### 1) DDA 농업협상의 본격화

2003년에는 DDA 농업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농업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진행경과를 계속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산물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농산물수출국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에 부정적인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폭적인 관세 감축과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DDA 농업협상그룹 하빈슨(Harbinson)의장은 작년 12월 18일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농업분야 세부원칙(Modality)에 관한 협상의 중간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초안 작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DDA 농업협상의 일정에 의하면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과 관세감축 따위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2003년 12월

로 예상되는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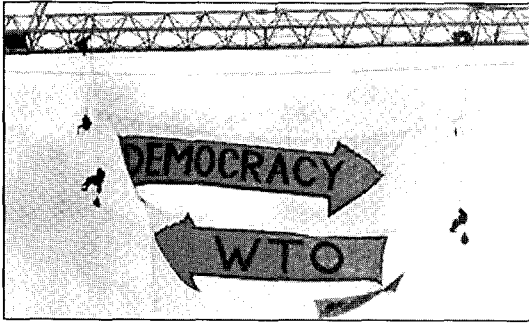
그러나, 종합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협상쟁점이 나라와 그룹별로 너무 대립되고 있어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 농업 특성을 반영한 양허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FTA 등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강대국 주도의 지역주의 경향은 200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주의는 WTO체제의 불안정이나 세계경제의 침체 등에 대응해오면서 확산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선진국은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세계경제 질서를 서구 자본주의 위주로 개편하고 있으며, 그 중심적인 기구가 WTO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DDA 협상이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 대립이 심해 조기타결이 어렵고, 통상마찰의 심화와 WTO체제의 불안정은 지역주의 경향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FTA가 세계 경제질서의 대세라며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농업분야의 부담이 적은 나라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싱가포르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FTA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 농업은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FTA추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협정 체결의사를 밝힌 나라는 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체결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과 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 싱가포르와 일본만

체결하고 나면 바로 농업강대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세계경제에 중국이 커다란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중국과 아세안은 10년 이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해,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내 산업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3) 국내농업은 시장지향·구조조정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 정부는 농정의 중심을 경쟁력 향상에 맞추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과 FTA를 통해 이러한 경향은 전 품목으로 확산될 것이다. 특히 2003년 농정의 핵심 중의 하나는 쌀 시장 개방을 비롯한 쌀 생산 축소 및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의 쌀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체 농업의 구조조정을 쌀이 막고 있으며 쌀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따라서, 정부는 2003년에 농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쌀을 구조조정 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DDA 농업협상에서 쌀의 관세화를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언론은 쌀 위기를 조장하고 쌀마저 구조조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으로 보인다.

#### 4)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한국정치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 지금까지 한국정치가 보여줬던 지역구도의 정치를 이념과 정책중심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끄는 농업개방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지만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개방은 불가피하되 피해를 보는 농민에게는 그 보상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으로써, 노무현 당선자는 피해보상대책과 개방협약이 함께 통과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무차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농업을 대표적 피해산업으로 만든 것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농업개방을 대세로 보고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농민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국정과 정치개혁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지역주의 정치 극복방안의 하나로 내놓았다. 이런 정치개혁 과제는 지금까지의 민주당, 한나라당 등 지역에 기반해 세력을 떨쳤던 정치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는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기본 원칙으

로 천명해 왔고,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농업이 북한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식량문제와 농업생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통합을 위해 한 가지 큰 변화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에는 좋은 효과를 미칠 것이며, 지방 재정기반이 확대되는 만큼 농업에 대한 지원조건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농연의 역할과 주요 활동방향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한·칠레 FTA가 체결되고, DDA 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쌀 생산을 축소하며 시장지향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분명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 1) 각종 통상협상에서 농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올해 한농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은 우선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DDA 농업협상의

세부계획 확정 때까지 최대한 국내 농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 지위유지와 쌀 시장 관세화 유예 등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FTA는 아직 완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농업을 위해 농민의 의견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후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2) 농정공약이행 감시로 농업희생대책을 촉구

한농연은 대선공약 관철 운동을 통해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밝혔으며, 주요 공약사항을 각 정당에 촉구한 바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수많은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굵직한 것만 들어도 ▲농림예산의 10% 확충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연장 ▲기 대출된 정책자금의 15년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를 1.5%로 인하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70만원으로 인상 ▲방역청 신설 ▲FTA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

정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학교급식법 제정 등이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가 한농연이 요구한 농정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회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 때문에, 한농연은 농정공약이행 감시단을 구성해 올해 한농연의 주요 농권운동의 과제로 부각시키고 농정공약 이행의 우선 순위 설정 및 조속한 이행을 관철시킬 것이다.

특히, 과거 대선공약 이행 촉구 활동의 경우 일회성 구호나 단발적인 이슈 제기로 끝나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기적 과제로 선정하여 주요한 농정공약의 완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3) 쌀의 구조조정을 막고 식량안보를 확립

앞서 언급했듯이 2003년 농정의 핵심 중 하나는 쌀 문제다. 쌀 생산을 줄이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국내 농업의 대폭적인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의 우선 가치인 식량안보 확립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쌀을 감축하고 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직불제로 보전하는 것은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보완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대책일 뿐이며 직불제의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확립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은 우리농업에서 쌀 농



사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비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산업 속에서 우리 농업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품목별 자급률 등 농정의 기본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나가야 한다.

또한, 동시에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농가 소득보전방식을 도입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 4) 협동조합 개혁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세계적으로는 각종 통상협상을 주목하고, 국내에서는 한쪽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농정공약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협동조합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은 농협중앙회의 비대화를 막고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일선에서 농민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지나 신

경분리,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중단 등 회원조합과 조합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재편되도록 촉구할 것이며, 일선에서 농민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5) 국민의 지지를 받는 운동의 확산

한농연은 일년 내내 끊임없이 농권운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농연 단독으로 농권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농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몇 년간의 운동을 보더라도 한농연이 외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와 함께 대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한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농연의 운동은 농업의 축소를 막고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을 유지하고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줄어드는 파이(농업)을 어떻게 나눠먹을까 하는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올해 최대한 외부단체와 연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농연